

다산포럼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위원장

한자가 만들어지던 초기 형태를 보여주는 갑골문에서 '백성 민(民)은 눈목(目)에 장과(戈)가 박힌 살벌한 모양의 글자였다. 가시로 한쪽 눈을 찔러 만든 노예, 즉 저항하거나 도망치기는 어렵지만 시키는 일은 할 수 있는 노동 인력을 뜻하는 글자였던 것이다. 이 글자는 역사의 진보에 따라 차츰 평민 백성으로 신분이 상승되었다가, 근대에는 드디어 국가 권력의 원천으로 대접받는 국민(國民)이며 천부 인권을 주장하는 시민(市民)이 되기에 이르렀다.

민(民)을 피동치자인 평민 백성으로 보던 조선시대에 "천하에 두려워할 만한 것은 오직 백성일 뿐이다"라고 하여, 민(民)을 근대적 시민처럼 역사의 주요 변수이며 주체로 인식했던 사상이 있었다.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許筠)은 '호민론'(豪民論)에서 지배 계급의 한없는 탐욕을 비판하며 백성 무서운 줄알라고 경고하던 것이다. 그 글에서 허균은 백성을 썬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지배자가 보여주는 것만 보는 수동적 태도를 갖고 있어서 쉽게 부릴 수 있는 백성은 향민(恒民)이다. 지배 계급이 이들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살가죽을 벗기고 뼈를 부서뜨릴 정도의 가혹한 착취를 견디

화난 사람들

다 못해 지배자를 원망하게 된 백성은 원민(怨民)이다. 이들도 꼭 두려워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했다. 항상 세상을 뒤엎을 야망을 갖고 향민들 사이에 숨어 사는 백성이 호민(豪民)인데 이들이 바로 지배 계급에게 두려운 존재라고 했다.

원민이 많아졌다 싶을 때 호민은 원민들을 선동하여 봉기한다. 혁명의 시작이다. 권력에 굴종하던 향민들은 봉기가 한창 힘을 얻는다 싶으면 기성 지배 계급을 버리고 봉기에 합류한다. 혁명의 절정이다. 호민은 언제나 혁명의 기회를 노리다가 틈만 보이면 실행하는 자들이므로 매우 두렵다고 했지만, 허균의 설명을 들어 봐도 예방할 방법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배 계급이 아무리 두려워한다 해도 별 소용이 없어 보인다. 허균은 꼭 두려워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했지만, 오히려 지배 계급이 두려워하고 노력을 쏟아야 하는 대상은 원민 즉 봉기에 직접 에너지를 제공할 정도로 국가 권력에 화난 사람들일 것이다.

화난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이 본디부터 다른 종족이었던 것은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중한 가족과 친구가 축제 거리에서 인파에 휩쓸려 죽고 다치고 후유증에 시달리는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 자들이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사죄조차 외면하고 애도조차 방해하면, 보통 사람도 화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화물 운수 화주들이 업무에 대한 지배력은 유지한 채 운송 노동자를 독립 사업자라 억지부리고 국가도 화주들 편에서 서서 그들이 노동자는 아니라며 각종 사회 보장에는 배제해 오다가, 운송 사업자로서 자신의 안전

을 위해 운송 거부를 주장하자 이번에는 불법 파업을 하는 노동자라 우기며 운송 개시 명령을 내리면, 보통의 운송 노동자도 화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간호사들의 숙원이던 간호법 제정을 후보 시절 약속했다가, 당선된 뒤에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합당한 설명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보면 보통의 간호사도 화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청에 재하청을 거치며 복합전이 되어버린 건설 현장에서 그대로 최소한의 생존을 지키고 무너지지 않을 건물을 지으려 노력하던 건설 노동자들을, 노동자 보호와 산업 구조 개선의 책임이 있는 정부에게 할 일을 방기한 채 노동자들만 '건뭇'이라 매도하던 어느 날 갑자기, 자존심조차 붕괴된 동료 노동자가 분신 자살을 하면 보통의 건설 노동자도 화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인권과 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끊임없이 요구하는데도, 예산과 행정을 틀어쥔 자들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학생의 보육과 안전까지 떠넘기며 그 모든 것에 교사 각자의 삶만 같이 날도록 강요하던 어느 날, 절망한 동료 교사가 자살을 하면 보통의 교사라도 화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들을 가르고 골라 약자들만 찾아내서 그들의 눈동자에 가시를 찔러도, 정부의 선전에 동조하며 보여주는 것만 보는 국민들이 지지해 주지만 하연 관장은 것일까? 사방팔방에서 화난 사람들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분노의 열기는 폭주를 향해 차오르고 있다. 팬클럽은? 원민이 많아지면 향민도 결국 원민의 편에서 가게 된다고, 허균은 경고했다.

김하림의 차이나 4.0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명예교수

중국은 '당국 체제' (黨國, party-state system)로 운용되는 국가이다. 1921년 창당된 중국공산당이 지닌 어려움에 극복하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를 수립한 역사를 기반으로 당이 국가보다 우위성을 점유하고 있는 체제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당정 일체형 국가라고도 하는 당국 체제는 당과 국가의 이중 지배, 즉 국가나 정부의 제도나 조직을 매개하는 형태로 당의 의사를 국가나 정부에 반영시키는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당국 체제는 신해혁명(1911)을 통해 아시아에서 최초의 입헌공화국인 중화민국을 건립했던 국민당이 통치하던 시기에 배태된 역사적 경험의 소산이다. 당국 체제는 1917년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 후 소련 공산당을 통해 착근시켰는데, 손문은 이 모델을 차용하여 국민당을 개조했다. 손문은 중화혁명당(이후 국민당)을 설립하고, 정당의 성격에 수직 관리, 신분 강조, 개인 복종 등을 강화했다. 총체적 성격을 갖는 혁명당으로서 당치(黨治)를 강화하고 당이 국가 건설의 경험 속에서 집권당으로 변화하는 당국 체제의 성격을 규정했다. 국민 정부 수립, 민주 집권제 실행, 당이 정부를 대신하는(以黨代政) 정치 체제, 건국대강에 기초한 군정(軍政), 훈정(訓政), 헌정(憲政) 시기 등 세 단계

당국 체제가 강화되는 중국

국가 건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손문이 주도한 국민당의 당국 체제 경험은 사회주의 중국으로 이어졌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당국 체제는 중화민국의 국민당 혼정 체제와 동형성을 보여준다. 역사적 환경과 여건은 다르지만 당에 의한 국가와 정부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공유하는 정치적 경향성을 지녔다. 초기에 공산당은 혁명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여 인민 대중의 지지와 동의를 의한 통치 정당성을 획득했다. 국가 건설 과정에서 당과 당원, 당과 인민의 거리를 좁히는 노력을 기울였고, 당조직이 최고 지도자의 개인 권위를 강화하는데 북부였던 역사적 유산과는 단절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그러나 당의 성격이 변하면서 당국 체제의 유산은 당과 지도자의 권위 강화로만 남아있게 되었다. 절대적 권위를 구축했던 마오 주석의 사망 이후, 중국은 개혁 개방을 통해 유연한 신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중국식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단계의 민주주의 체제를 향한 전환을 추구하겠다고 평가된다. 시장 경제의 발전→사회적 이익의 다변화→계약의 규칙과 법치 문화 형성→시민사회와 사회단체의 충분한 발전→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민주화 과정을 통한 발전을 상정한 것이었다. 초기의 정통성은 그 효력이 약화되었고, 인민들은 인민 주권, 전체 인민이 행복한 삶을 사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공산당의 약속이 실현되기를 욕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공산당은 경제적 발전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제고하고, 정치적으로 인민 주권을 진정으로 실현하여 정통성을 획득해야 했다. 이 점에서 당국 체제의 정당성과 정통성은 권력보다는 전략과 정책의 효용성에서 재생산되고 유지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력과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국력 증강을

통해 중국몽과 일대일로를 강조하는 현 시진핑 주석의 일인 체제는 당국 체제의 강화와 신권위주의의 강조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가주의의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이 과정에서 사회와 개인의 항발성, 다양성, 자발성 등은 제한을 받을 위험이 크다. 당국 체제에서 당은 최고의 정치적 권위로서 국가와 사회, 도덕과 법률의 관계를 처리함으로써, '이당치국'(以黨治國)을 형성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것이 당에 의해 통일적으로 관리되고, 모든 사소한 것까지 독점하며 당정이 일원화된 통치가 실행되었다. 대의 민주제는 주기적 선거에 의해 그 지배의 정당성이 담보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세습과 같은 형태로 지도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엘리트주의적이고 당 중심적으로 지도자가 선출된다. 일종의 중국만의 합리적인 지도자 선출 제도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중국 피지배층이 중국의 지도자 선출에 어느 정도 수준의 타당성·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산당이 대중 정당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계급은 신분화되어가고, 국가 권력은 관료화되어가고, 당의 권력은 오히려 강화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당국 체제는 다양화되고 다원화되는 사회와 개인의 요구, 사회적 약자의 울부짖음, 소수 민족들의 생활과 종교 신앙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권력 지배를 위한 이익 배분과 이를 위한 통치 기술 개발에만 치중한다면 그 정치 체제는 곧바로 새로운 정치적 압력에 직면한다는 것은 이미 역사가 입증했다. 자기 혁신이 없는 권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통성을 상실하고 통치 능력을 마비시킨다. 중국은 4.0 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기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목적댐 역할론



류용욱
전남대 토목공학과 교수

최근 기후변화로 전 세계에 폭우·폭염·가뭄 등 기준에 겪어 보지 못했던 자연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중국 북서부, 남유럽 등의 기온이 50도까지 치솟은 가운데, 올해 7월이 1800년대 중반 시작한 세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될 전망이다이라고 한다. 같은 기간 인도에서는 45년 만의 폭우로 대표적인 문화재인 타지마할이 침수될 위기를 겪었고, 굳이 멀리 지구촌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남부 지방 역시 장마 기간(6월 25일~7월 24일) 역대 1위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매우 강하고 많은 비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전 국민에게 슬픔을 주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도 다르지 않다. 최장 기간 가뭄과 역대급 장마가 2023년 일 년 사이에 발생하였다.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뭄으로 제한 급수를 걱정하고 있었고 주압댐의 경우 5월 8일, 섬진강댐의 경우 7월 5일에서야 가뭄 단계가 해제되었다. 지

금은 역대급 강우로 전국 곳곳에 수해 피해가 발생하였고, 공공 시설과 농경지 피해 또한 매우 큰 실정이다. 장마 기간 한 달간의 섬진강 유역의 주요 댐 강우 실적을 살펴보니 섬진강댐 940mm, 주압댐 902mm를 기록하였고 이는 1년 강수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양으로 두 댐 모두 댐 준공 이후 역대 1위의 강수량을 보였다.

한편 이러한 역대급 강우에도 섬진강 유역의 하천은 큰 피해가 없었다. 이는 섬진강 유역에 있는 섬진강댐과 주압댐 등 다목적댐과 영산강 유역의 농업용수댐이 하천 유량 조절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다목적댐은 홍수 공급, 홍수 조절, 수력 발전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댐으로서, 이수(利水)와 치수(治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홍수와 가뭄재해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물이다.

이번 7월 집중 호우 당시 다목적댐의 치수 역할을 살펴보면 섬진강댐의 최대 유입량은 7월 14일 초당 2000 t에 달하였으나, 동일 시간에 150~300 t을 방류하였고 매우 하천의 유량이 감소한 시기에 초당 700 t 이내로 방류하여 하류 하천의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바지하였다. 마찬가지로 주압댐도 7월 17일 최대 유입량이 초당 1700 t에 달할 때 520 t을 방류하였고 하천 유량이 감소한 이후 700 t 이내로 증량하여 하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였다. 다목적댐의 유입과 방류의 시간차 운영이 없었다면 하천

유량의 증가로 인해 큰 홍수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의 홍수기에 발생하는 강우를 저장하여 남는 기간에 활용해야 하는 우리나라 강우 및 수자원 이용 특성상 다목적댐의 이수적 기능도 매우 중요하다. 올해 홍수기에 발생하는 댐 유입량 중 일부 댐에 저장하여 현재 주압댐의 저수량은 지난 92년 준공 이후 같은 기간 평균 저수량의 120%, 가뭄 대응 중이던 작년 대비 230% 수준으로 확보하였으며, 섬진강댐의 경우에도 동기간 과거 평균 대비 150% 수준의 저수량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의 생활용수 및 농업·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저수량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내년 홍수기까지는 가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과 극한 홍수는 강도는 더욱 세지고, 빈도는 더욱 잦아질 것이라고 한다. 변동성이 커진 기후가 이어진다면 물 재해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피해는 오히려 국민이 받게 될 것이다. 이수와 치수는 관리적 관점에서 상반된 특성이 있어 두 가지를 모두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댐, 특히 다목적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수와 치수 모두를 고려한 균형 있는 다목적댐 운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社說

민간 공원 사업 본격화... '녹색 도시' 광주로

지지부진했던 광주 지역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이 아연 활기를 띠고 있다. 전체 민간 공원 면적의 40%에 육박하는 중앙공원 1·2지구의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이 최근 잇따라 승인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옛것제 서구 풍암동 '중앙 1지구 비공원 시설 공동 주택 신축 공사' 사업 계획을 승인·고시했다.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규모의 아파트 2772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앞서 중앙공원 2지구 민간 사업자도 지하 2층·지상 29층 695세대 규모의 사업 계획 승인을 마무리했으며, 오늘부터 분양을 시작한다.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을 재정비하는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은 공원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매입해 일부 땅에 아파트를 지은 뒤, 그 수익금으로 나머지 부지를 재단정해 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광주시는 2017년 4월부터 아홉 개 공원, 열 개 지구에 대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데 이 사업은 그동안 토지 보상과 행정 절차 지연으로 공회전을 거듭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민간 공원(789만 7000㎡)의 38.3%를 차지하며 도심 중심축을 이루는 중앙공원 개발이 본격화돼 올라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으로 전체 공원 면적의 30%까지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데도 9% 정도만 허용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꼽힌다.

토지 보상과 사업 계획 승인이 마무리되면서 올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 대상지에서 아파트 분양과 함께 공원 조성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파트 건설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을 위한 친환경 녹지 공간 조성이다. 불법 경작 등으로 훼손된 부지에 나무를 심어 생태 숲을 복원하고, 산책로 개설 등으로 도심에서도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명품 공원을 만드는 데 실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잇따르는 '묻지 마 범죄' 예고 선제적 대응을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묻지 마 칼부림' 범행 예고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광주·전남은 다섯 건의 흉기 난동·계시 글 협박범 사건 각각 조사하고 있다. 특히 서울 신림동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게시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외출하기가 무섭다'고 하소연을 하는 지경이다.

실제 광주 광산경찰은 옛것제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다는 글을 올린 A씨를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내가 작성한 게시 글의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선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새벽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이 예고된 초등학교 주변에 경찰 인력을 배치했고,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방학 중

교육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경찰은 최근 사건들이 다중 밀집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역·터미널, 관광지, 백화점 등 다중 밀집 지역을 선정해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 마 강력 범죄'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광주·전남도 예외는 아니며 인터넷에 올라온 '살인 예고' 글만 10여 건에 달해 모방 범죄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묻지 마 범죄'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 예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경찰의 단속에도 한계가 있으나 사전 예방이 가능한 사안부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용의자가 인터넷에 범행을 예고하는 특성 있는 만큼 신속하게 게시자를 색출, 엄단하고 처벌 강화를 통해 모방 범죄를 차단해야 한다. '묻지 마 범죄'는 지금까지 범죄와 양상이 다른 만큼 경찰은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인명 피해를 막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내가 누워 있는 이 방바닥에서부터 불과 사오 미터 남짓한 아래쪽 공간의 풍경은 어떤 것일까. 꼭 그만큼 높이의 위쪽 공간은 또 어떤 모양일까."

1978년 이상문학상 수상작인 이동하 작가의 단편소설 '홍소'(洪笑)에서 주인공 '나'는 한밤중 잠에서 깨 '지상 몇 미터의 높이에 나는 누워 있는가?' 반문한다. 1970년대 후반, 5층짜리 13~14평 임대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주거 문화와 세태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아파트 문화는 한국 주거 문화의 대세를 이

철근 없는 아파트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KOSIS)에 따르면 '행정 구역별 주택 유형'(2021년 기준)에 따르면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 비중은 전국 평균 51.5%로, 단독 주택 30.4%와 대조를 이룬다. 특히 세종시(75.0%)와 광주시(66.9%), 울산시(60.6%), 경기도(58.3%)가 압도적이다.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클레조는 1990년 서울을 처음 방문했다가 거대한 아파트 단지에 충격을 받았다. 이후 '한국은 어떻게 아파트의 나라가 되었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아 펴낸 '아파트 공화

국'(2007년)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한국은 어떤 도시 형태와 사회 구조를 발전시키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어떤 주택 정책과 주거 공간을 만들어야 할지 배려는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부터 무량한 구조(보 없음)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로 시공된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1970년 4월 서울 와우 아파트부터 지난해 1월 광주 화정하이파크에 이르기까지 50여 개 아파트가 철근이 없는 구조로 지어졌다. 공사(工期) 단축과 원가 절감을 이유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뼈대 역할을 하는 철근을 빼먹는 공사 관행이 아니냐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촉발된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통해 설계·시공·감리 과정에 만연한 부실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또한 확인화된 아파트 문화를 탈피하는 새로운 주거 문화 양식도 고민해야 한다. /송기동 예방부장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주간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42 전 남 본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행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